

# 웰니스 트렌드에 '한의학' 뜬다 수출 포트폴리오 다각화 큰 도움

무협, 글로벌 전통의약 시장  
2027년 시장 규모 7682억 전망  
미국·유럽 등 고소득층 소비 늘어  
원료 가공·응용 제품 경쟁력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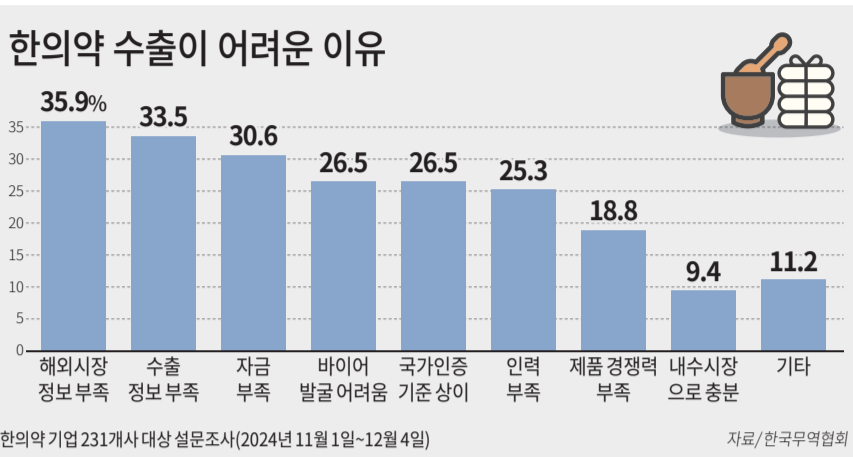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예방 중심으로 변화하고 의료비 절감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한의약 등 전통의약 산업이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6일 발표한 '글로벌 전통의약 시대, 한의약 산업 경쟁력 분석과 수출 촉진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전통의약 시장은 2022년 약 5186억달러에서 2027년 약 7682억달러로 연평균 8.2%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전통의약이 의료비 절감과 만성질환 예방에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세계 주요국도 그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동인당, 운남백약그룹), 인도(히말라야, 다부르), 일본(쓰무라), 독일(벨레다) 등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인 기업을 다수 육성하며 전통의약 위상을 높이고 있다.

보고서는 전통의약이 최근 웰니스(wellness) 트렌드와 결합해 미국과 유럽 등 서구권 고소득층 소비자를 중



심으로 소비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미시장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지 않은 만큼 앞으로 그 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전통의약인 한의학 시장 역시 2021년 약 12조6000억원으로, 20217년 11조원 대비 약 14.8% 증가하며 성장세다. 특히, 한의약을 활용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의료 관광객이 늘어나 새로운 수요가 뒷받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수요는 해외에서도 발생해 한의학 제품 수출로도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무역협회가 한의학기업 231개사가 응답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6.7%가 전통의약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를 체감했으며, 64.1%는 이로 인해 매출에 긍정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26.4%

만 수출을 진행하고 있어 아직 해외시장으로 진출한 기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수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복수응답)로는 ▲해외시장 및 수출 관련 정보 부족(89.4%)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자금부족(30.6%) ▲상이한 국가별 인증 기준(25.3%) 등으로 관련 지원사업과 정책 필요성이 확인됐다.

임지훈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아직 전통의약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은 경쟁국인 중국과 인도 등에 크게 뒤처지지만, 원료를 가공해 응용한 제품 분야에 경쟁력이 있어 성장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한의약을 활용해 천연물신약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제품군을 확대한다면 우리 수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국제투자협력대사에 최종경 임명

정부 "대외신인도 제고 적임자"

최종경(68·사진)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국제투자협력대사에 임명됐다.

정부는 6일 "우리 경제의 건조한 펀더멘탈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 중인 외국인 투자 유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최종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을 대외직명대사인 국제협력투자대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대외직명대사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지도를 겸비한 인사에게 대사의 대외직명을 부여해 정부의 경제외교활동에 활용하는 제도로, 임기는 1년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했다.

정부는 "최 대사는 지식경제부 장



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기획재정부 차관 등 경제·산업·실물경제 전반에 걸친 다양하고 폭넓은 업무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은행 상임이사, 주필리핀 대사 등 국제기구 및 외교관 근무 경력과 함께 한미협회 회장 재임 중으로 한국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대외활동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향후 최 대사는 국내외 외국인 투자자 및 관련기관 대표 면담, 외국인 직접투자(FDI) 관련 해외기관 방문 및 주요 인사 면담, 해외 투자설명회(IR)시 국가 홍보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확대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 "농업분야 대설·한파 피해 최소화 총력"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피해예방 현장조치 점검회 개최

이번 주 중·후반 한파 및 일부지방 대설 예보에 따라 정부가 농업분야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 조치가 나섰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송미령 장관은 오는 9일까지 충청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3일 원예·축산 등 분야별 사전대책을 점검했다. 이어 이날은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송 장관은 "농업인이 언론 등을 통해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지자체·농촌지도기관 등에서 안내하는 단계별 조치 사항을 현장에서 적극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대설·한파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7일부터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으며, 9일까지 서해안 3km 상공과 해수면의 온도차(최대 약 32도)로 인해 충청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전북 지역은 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설·한파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대 40cm의 매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지난해 11월 중부지방에 농축산시설 붕괴 등 큰 피해를 일으켰던 폭설도 해기차(약 55도)로 인해 많은 눈이 내렸던 만큼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 조치가 중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12월까지 농진청·농협·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최근 3년간 피해가 발생했거나 노후화된 농축산시설 등 5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내 버팀목 등 보강지주 설치, 외부 차광막·보온덮개 제거, 난방장치 점검, 제설장비 구비 등 예방 조치사항을 사전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현장 보완조치를 완료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층 일자리 상담

40세 이상 중장년층·사업장 대상  
취업상담·심리검사·기업진단 제공

노사발전재단은 1월 한 달간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40세 이상 중장년층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장년 일자리 상담버스'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중장년 일자리 상담버스'는 중장년 내일센터 서비스 확산과 인지도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그램은 중장년층 개인 및 고용 잠재 사업주를 대상으로 취업 상담, 심리검사, 기업진단 등을 제공하며, 센터별 교육과 서비스를 연계해 중장년층의 일자리 상담을 지원하고 고용 잠재 기업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노사발전재단 중장년내일센터의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진행된다. 구직자는 구직 전략 점검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 맞춤형 교육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재직자는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의 경력 특성을 파악하고 경력 개발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은 중장년 인력 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업진단, 일자리 컨설팅, 맞춤형 교육을 통합 제공하는 사업주지원패키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중장년 일자리 상담버스는 수도권(서울, 인천)과 영남권(부산, 울산, 대구)에서 운영된다. 노사발전재단은 중

장년 인구의 약 75%가 거주하는 수도권과 영남권을 선정했다. 거점센터는 서울중장년내일센터와 부산중장년내일센터 등으로 지정되며, 재단센터 2곳이 각 지역 내 상담 일정 조율과 운영을 지원한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금천구청, 인천 운서역 등에서 운영되며, 영남권에서는 부산, 울산, 대구 순으로 지역 중장년층과 기업을 찾아간다.

노사발전재단은 중장년층의 고용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중장년 고용 활성화 콘퍼런스'를 개최해 중장년 우수사례와 재취업지원서비스 우수 기업을 시상했다.

/김대환 기자 kdh@

## '서면 발급의무 위반' 크래프톤 등 시정명령

공정위, 2곳에 과징금 총 68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업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크래프톤,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에 각각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에는 각각 3600만원, 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3개 사업자들은 수급사업자에게 게임 관련 그래픽·모션·녹음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고,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 서면을 발급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거나,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 업종별 특성 반영 효과적 산재 예방 나서

안전보건공공, 참여단체 모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내달 3일까지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지원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지원사업'은 업종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산재예방 예방 활동을 위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업종별 협·단체를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안전보건사업을 기획·추진하면, 정부가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요 공모 과제는 업종별 협·단체가 노사단체, 비영리법인, 민간 재해예방기관 등과 협업을 전문지식 공유, 자료제작, 합동 컨설팅 등을 진행함으로써

협·단체가 독자적으로 안전보건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업종별 협·단체의 공정 전문가가 컨설턴트 대상 전문교육 및 합동컨설팅 실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가이드 제작 ▲협·단체 담당자 안전보건 특화 교육 ▲안전보건 우수사례를 업종별 협·단체를 통해 확산토록 하는 것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종별 협·단체 및 컨소시엄은 안전보건공단 본부로부터 관련 서류를 전자우편,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 후에는 정부, 학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사업 수행 능력과 사업계획의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김대환 기자